



아베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긍정적 전망 확산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아베 신조(安倍晋三)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피, 무제한 금융완화 등에 대해 국내외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, 정작 일본 국민들은 ‘일단 기대’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지난 2일 아사히(朝日)신문이 민간 컨설팅사에 의뢰한 분석 결과¹⁾에 따르면, 70% 이상이 아베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하였음.
 - 그 결과 아베 총리가 언급된 1,743건의 70%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(12월 26일 정권 출범일의 경우에는 90% 이상이 긍정적)한 반면, 노다 전 총리와 이시하라 일본 유신회 대표 등에 대해서는 70%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그 외 NHK 등도 민간회사 10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일본의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최소 0.8%에서 최고 2.3%까지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.
 - 이는 수출 증가와 2014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등을 앞두고 소비 및 주택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.

■ 한편, 아베 총리는 과거 총리 재임(2006년 9월~2007년 9월) 시절 대기업 친화정책을 펼친 바 있음.

- 이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베 총리의 공격적인 재정·통화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제조업체에 1,000억 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일본 경제계는 벌써 활기를 띠고 있음.²⁾
 - 또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도 허용하기로 해 노다 전 총리의 ‘원전제로’방침을 뒤집기도 함.
- 한편, 경제전문가 15명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세계경제 전반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원동력을 바탕으로 일본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했으며, 올 초부터 일본의 수출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.

1) 지난해 12월 16일 총선부터 26일 아베 정권 출범까지 11일간 트위터와 SNS를 통해 ‘긍정’과 ‘부정’으로 분류하여 평가함.

2) 전자·기계 등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노후 설비와 자산을 매입하고 최신설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의 1/3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투자 계획을 말함.

- 세계경제 전반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“유럽은 명백한 후퇴, 일본은 일시적 후퇴, 미국은 회복 국면, 신흥국은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”는 의견을 제시
- 한편, 일본은 “아베 정권의 대형 추가경정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공공사업 등이 활황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”는 전망도 제기되었음.

(아사히 外, 1/2)